

# 도의회, 도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 증액 10조3217억원 규모

심사 앞두고 내실 다지기 위해 전문강사 초청 연찬회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전주2)는 27일 오전 연찬회를 갖고 27~29일까지 2022년도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일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본예산 대비 1조2212억원이 증액된 10조3217억원 규모의 전라북도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27일 오후부터 예결위 본심사에 들어간다.

일반회계는 8조3,929억원(본예산대비 9,521억 원 증가, 12.8%↑), 특별회계는 1조50억원(본예산대비 96억원 증가, 9.0%↑), 기금은 9,238억원(본예산대비 2,595억원 증가, 39.1%↑)으로 추경 규모로는 역대 최대규모이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추경 편성의 목적 적합성,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시정질자 이행 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삼고, 최근 고유가 및

고물가 인한 서민경제 안정,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소득안정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꼼꼼하게 심사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 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심사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27일 오전 외래전문강사를 초청, 연찬회를 마련했다.

우지영 한국지방정치연구소장이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이해와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예결위원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김경수 기자

“남북교류협력 기금 사용처 확대해야”

박용근 도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은 27일 전북도 소관 추경 제1차 회의에서 남북관계 협정 시 집행 예정으로 적립 중인 107억원 가운데 3년간 집행 실적이 없음을 강하게 질타하고 기금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말까지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경기도 등 타 시도의 경우 직접적인 대북사업은 진행하지도 못한 대신에 통일교육사업 및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올해와 비슷할 것을 감안해 기금 사용처를 다양화하는 등의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 남북교류협력이 가능하게 될 때를 대비해 동시에 단기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기정과 북한 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처 확대 및 명칭을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은 “전북도 노인복지기금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이 2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업유치특위 구성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초당적 기업유치특위 제안”

민주 김수홍 의원, “도내 정치·경제·사회

문화계 주요 인사 총망라… 전북만의 매력 있어야”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전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연찬회를 기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혁신학교 공모 중단, 반민주적 행정 폭력”

전북 혁신학교 연대(준), 성명서 통해 규탄

전북 혁신학교 연대(준)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혁신학교 공모를 일방적으로 중단한 전북교육청을 규탄했다.

이 단체는 혁신학교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교사 30여 명이 모여 긴급하게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날 성명에 따르면 지난 22일 각 학교에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다는 공문이 내려왔다. 그 까닭은 더불어 미래를 여는 전북교육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었다. 2022 혁신교육 기 본계획에도 또렷이 나와 있는 신규 혁신학교 공모를 교육감이 바꿔자마자 바로 뒤집은 것이다.

이들은 이번 혁신학교 공모 중단은 반민주적 행정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먼저, 12년 동안 이어왔던

혁신교육 그리고 여전히 진행형인 학교혁신의 물결에 커다란 생채기를 남겼다. 민주적 자치공동체, 학생 중심의 교육을 기치로 생동감 넘치는 학교로 만들고자 했던 혁신학교는 학교를 학교답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

럼에도 혁신학교 공모를 중단한 것은 지금껏 어렵게 만들어온 혁신 교육의 수명이 다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신규 혁신학교 준비를 위해 해 애쓴 학교에 크나큰 실망감을 줬다. 혁신학교 공모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끊임 없는 토론과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

기 위한 수많은 노력으로 신규 혁신학교 신청을 한다. 과연 이 학교가 겪었을 실망감과 좌절을 들여다 볼 마음은 있는가. 그저 공문 한 장으로 교육공동체의 노력에 침울을 끼얹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 듣지도 않고, 의미나 취지도 살피지 않아도 같은 체 공문 한 장으로 지침을 내리는 반민주적 행정의 전형이다. 12년간 이어온 혁신학교 운동의 목소리를 들으려고도, 의견을 받는 친구도 미련하지 않은 체 교육감이 비판되었으며 ‘그냥 받아들여라’는 통보형 공문에 학교 협장을 상실감에 휩싸여 있다. 더 구나 이런 내용을 미리 언론에 흘리고 바로 공문으로 보내는 행태는 애써 만든 민주적 학교 문화를 단번에 되돌리 는 뇌행이라고 언급했다. /정은성 기자

## 전교조 전북지부 “공립유치원 확보, 교육감의 의무”

‘군산 신역세권 공립단설유치원 재검토 지시’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군산 신역세권 공립단설유치원 재검토 지시에 대한 입장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지난 7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군산 신역세권 단설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유치원 신설이 기존 사립유치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

전북지부는 “해당지역은 택지개발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건설 등에 따라 7천 세대가 입주 예정이고 예상 유아 수는 3백명에 달한다”며 “그러나 유치

원은 하나도 없고 거리상으로 3km나 떨어진 유치원들은 유아가 모두 차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다.

이어 “유아교육법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조항)는 새롭게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교육감이 초등학교에 유치원을 병설하거나 별도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교육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므로 하지 않으면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임 교육감이 계획을 세워

자체투자심의를 마친 사항을 타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형법상 직권남용죄”라며 “취소가 현실화되면 서거석 교육감을 고발하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청이 좋은 교육기관을 세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신도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가 바라는 방향”이라며 “유치원은 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총량제 적용도 받지 않아 신설이 자유롭다. ‘유아학교’로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 지역에 공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은성 기자

## “공립유치원에도 추가로 1인당 13만5000원 교육예산 지원을”

전북교사노조,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 의견 정정 요청

“공립유치원 학부모 원비 내고 있다는 의미 아냐” 거듭 주장

전북교사노조가 지난 25일 낸 성명서 전북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 지원에 대한 전북교사노조의 의견에 대한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공립유치원은 학

부모들이 별도의 원비를 내지 않는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원별로 학부모 원비 납입액이 다르다.

전북교육청의 추가지원금 결정은 사립유치원에만 월 1인당 13만5,000원의

예산을 주기로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북교사노조 입장은 공립유치원에도 추가로 1인당 월 13만5,000원의 교육예산을 지원하려는 것. 그러면서 공립유치원 학부모들이 원비를 내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거듭 주장했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과 의정방침이 형식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제9대 순창군의회는 군민이 공감하고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원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순창군의회가 효율적이고 실속 있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다. 4년 후 순창군의회가 군민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순창=이양원 기자

## 순창군의회 의정 방침 ‘소통·변화·창의·현장’

제9대 새 슬로건 등 선정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27일 제9대 의정활동의 지표가 될 슬로건과 의정방침을 선정했다.

최근 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선정한 결과 슬로건은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의정방침은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빌로우는 현장 의정’으로 결정했다.

신정이 의장은 “새로 선정한 슬로건

손 셧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